



고방오리들이 물 속을 들여다보는 이유 27일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해안에서 고방오리들이 머리를 물속에 넣어 먹이를 찾고 있다.

강희만기자

道 JDC 개입 확대·외국영리법인 대학 추진

도, 8단계 제도 개선안 확정... 3월 제주도의회 심의 예정
지하수법 등 5개 법률 포괄적 권한이양 등 117개 과제 담아
7단계서 무산된 민감 현안 포함돼 특별법 개정 난항 예상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8단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 도내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제 징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과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도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 등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은 총 117개 과제로 꾸려졌으며 내용이 워낙 방대해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건너뛰고, 3월 회기 때 심의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지노와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

는 국제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 입장객에게는 개별소비세로 1인당 2000원이, 골프장과 경마장 입장객에는 각각 1만2000원과 1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 카지노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징수 권한도 넘겨 받을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매출액이 500억~1000억원 이하이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1000억원이 넘으면 10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개별소비세로 받는다. 또 현재 별도 규정되지 않은 카지노 허가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 뒤 이후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 공기법인 JDC(제주국제자

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와 의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도는 JDC 임원추천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임이사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으로 도가 JDC에 무상 제공한 도유지에 대해선 반드시 도지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JDC가 국토부에 주요 사업 시행계획과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리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지난 2021년부터 시도된 JDC 명칭 변경도 개선안에 포함시켜 JDC 이름을 '개발'을 삭제한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에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찬반이 극명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이번에도

빠졌다.

정부로부터 가져온 권한을 다시 넘겨주는 것도 있다. 도는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폐쇄·지도감독 권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재이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피선거권 자격 기준을 다른 지역처럼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 기구를 상설화 하는 방안,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도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은 도의회 동의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 심의,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허용은 이 전에도 두차례 추진됐지만 정치권에서 반대해 불발됐고, JDC 임원 추천권 부여도 7단계 제도 개선 당시 시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민기자

‘B형 독감’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

검출률 12주 연속 30%대... 도, 백신 접종 등 당부

제주 지역 B형 인플루엔자(독감) 검출률이 증가세다. 예년보다 유행 시점이 빠른 가운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사업(K-RISS)을 통한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결과 올해 들어 B형 인플루엔자 검출률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1주 30.4%, 2주 38.5%, 3주 47.4%, 4주 36.7%로 12주 연속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1주 35.1%, 2주 33.5%, 3주 39.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B형 인플루엔자 유행 시점이 예년보다 8주가량 빠른 특징을 보였다.

연령별 분석 결과 1월(1~4주) 기준 B형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7~12세가 66.7%, 0~6세 26.3%, 13~18세

20.0%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습이다. 반면 성인 연령층의 B형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0~64세 7.7%, 19~49세 5.3%, 65세 이상 4.3%로 상대적으로 낮다.

질병관리청에는 최근 검출이 증가하고 있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예방 접종을 통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오순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제주에서 B형 인플루엔자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령기 아동을 통한 지역 사회 내 확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설 앞뒤 소상공인에 100억원 특별 보증

도·제주은행·신용보증재단 ‘희망 원스톱 특별보증’ 협약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27일 제주은행 본점에서 제주은행,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설 명절 긴급 자금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희망 원스톱(One-Stop)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별보증은 제주은행의 특별대출금 6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총 1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월 5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대규모 점포와 사행성·유흥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된다.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0.3%포인트(p) 낮은 0.9%를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기존 대비 0.9%포인트 감면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을 도입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부터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는 ‘보증드림’ 앱에서 비대면 심사를 받은 뒤 제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도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1000여 개 업체가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은지자

6·3 지방선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1주일 앞으로... 2면 / 현혈 풍경 바꾼 ‘두쫘쿠’... 5면

